광주지검, 지방선거범죄 본격 단속

금품선거 등 5대 주요 선거범죄 집중 단속

고발전 긴급통보제도 활용 핵심증거 확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은 21일 오전 청사 소회의실에서 내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시·도선관위와 광주·전남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범죄와 관련, 신속·효율적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천대가 또는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 객관적 근거가 없는 폭로·비방 등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5대 중점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계획도 논의됐다.

광주지검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을 4개 구역으로 나눈 지역별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4개 구역 4명의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특별근무체제에도 돌입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 전 압수수색을 통해 적시에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고발전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석담 공안부장검사는 "금품선거 등 빈발하는 5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특히 경선 전후 각종 불·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는 조기에 퇴출하는 등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광주지검 관할 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318명, 이중 구속자수 는 14명 이었다. 제6회 입건 인원은 312명, 구속자 수는 16명으로 집계됐다.

5회 지방선거 대비 6회 지방선거에서는 금전 선거사범(28.6%→35.3%)과 흑색 선전사범(17.0%→21.1%)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춘정 기자

서울국세청, 100명 동원 '농어촌공사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나주혁신도시 농어촌공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내려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세버스 4대를 동원해 조사관 100여명을 이날 오전 9시부터 농어촌공사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농어촌공사 본사가 경기도 의왕에 소재했던 2013~2015년에 수주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는 공사의 전국 사업장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 달여간 계속 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3~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특수목적 조사는 아니다"며 "본사가 나주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공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조사 인력이 내려온 것으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도 세무조사를 받지만 자주 받지는 않는다. 공사를 상대로 한 정기세무조사는 없다" 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평창 앞으로 평창올림픽 개막을 50일 앞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성 대형 싱크홀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 추진

장성군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 농경지에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의 원인을 분석하는 민관합동 조사가 추진된다.

21일 전남도와 장성군 시멘트공장 폐쇄 촉구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무안군 전남도지사실에서 전남도, 장성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면담에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준호 전남도의원,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 장성군 민원실장, 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면담에서 "석회석 광산의 발파 충격으로 수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안전 대책 마련과 채굴 인가 불허를 요구했다. 반면, 고려시멘트 측은 '싱크홀은 광산 운영과 무관하며 지하수 이동에 따른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장성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남부광산안전사무소, 고려시멘트, 대책위가 협의해 조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는 지난 2008년 6월에 이어 올해 6월에도 모를 이식한 논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만큼 정밀 안전 조사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담 참석자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방법(전문기관·전문가 참여, 장비 등)과 일정, 예산을 확정키로 했다.

전남도는 국토부·농축산부·광해관리공단·철도시설공단·장성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싱크홀 발생 원인 규명에 협조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고려시멘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해를 키운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석회석 채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채굴 범위가 지표면 안전에 이상을 미치지 않을 정도인지 여부를 이달 말 안에 공개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광고 문의 : 광고전문지사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정수기 팔아요" 농가 빈집 83곳 턴 40대 구속

고흥경찰서는 21일 농촌지역 빈집만 턴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30분께 고흥군 금산면 한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 지난 2008년 8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전남·전북 일대를 돌며 총 83회에 걸쳐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수기 판매원인 이씨는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낮시간대 밭일을 하거나 경로당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CCTV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물색 도중 "계세요"라고 물은 뒤 집주인·주민들을 만날 경우 길을 묻거나 정수기 구입을 권유했으며, 빈집일 경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노인들이 장롱 서랍장과 장판 아래에 숨겨둔 돈과 귀금속을 훔친 뒤 서랍장 위치 등을 복원,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9년간 훔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유흥을 즐겨온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교도소 가겠다" 편의점 강도 미수 50대 덜미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B(60·여)씨에게 벽돌을 던져 위협한 뒤 금고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나려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오후 6시40분께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셔 쫓겨날 처지에 놓였으며 돈도, 갈 곳도 없자 교도소에 가겠다는 심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찰법당에 영아 유기 20대 부모 검거

영하의 날씨에 태어난 지 1주일 된 여자아이를 사찰 법당에 유기한 비정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27)씨와 B(26·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찰 법당에 갓난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이 사찰 보살 A(77·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영하의 날씨에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해 사찰을 찾았고, 사찰 관계자 몰래 법당 뒤편으로 이동해 아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찰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이 타고 온 렌터카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

애초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들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 가양동 도로 한복판서 도시가스 누출

21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도로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30분께 강서구 가양동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 나왔다.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유출을 차단하고 인근 도로를 통제했다. 또 인근 150여곳의 가스 공급이 한동안 끊겼다.

이번 사고는 주변 공사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가스 배관이 손상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측은 정확한 가스 누출 원인을 파악 중이다.